

## 영국의 시민교육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영국의 시민교육 제도화에 관한 연구\*

### <국문요약>

이 논문은 공교육 제도 안에서 실시되고 있는 영국의 시민교육 제도화 배경과 시민교육의 내용 그리고 시민교육의 성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지만 시민교육을 체계화하고 학교 내에 제도화 하려는 시도는 21세기가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청소년 문제의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들을 극복하고 전 국민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시민교육이 등장하였다. 국가교육과정 내 시민교육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공적인 삶에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과 이해를 갖추도록 돕는 것이다. 시민성 함양과 참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며, 권리와 의무, 책임을 깨달아 능동적인 시민(active citizen)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영국의 시민교육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교과로서 운영되면서 동시에 다른 교과목 속에서 시민교육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교육은 단지 수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에 영향을 끼치며, 지역사회와도 적극적인 연계를 맺는다. 시민교육의 제도화 이후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시민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지속가능성, 글로벌 연계와 인권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었다.

[ 주제어 ] 영국의 시민교육, 시민교육 제도화, 시민교육

### 정 재 원 (Jeong, Jae-won)\*

(E-mail : mahapanya@khu.ac.kr)

논문접수일 : 2012년 12월 14일

논문심사일 : 2013년 1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3년 2월 15일

\* 학위취득대학 : 이화여자대학교  
현직: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I. 문제제기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의회민주주의의 원형 혹은 웨스트민스터 모델로 알려진 영국의 민주주의는 현대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영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한 시민의 형성이라는 과정과 함께 한 역사였다. 그러나 프랑스와 같이 격렬한 혁명의 과정을 경험하지 않은 영국은 시민교육을 체계화 하는데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지만 정작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본격적인 논쟁이 진행된 것은 1990년대가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민교육을 체계화하고 학교 내에 제도화 하려는 시도는 21세기가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현재 영국은 사회과라는 교과가 존재하지 않고, 지리, 역사, 시민교과가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중등학교의 역사와 지리 과목으로는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시민을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10여 년간의 논란 끝에 2002년도부터 중등학교<sup>1)</sup>에서 필수법정교육과정으로 시민교육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교육은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적·도덕적 책임성(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을 갖고, 공동체에 참여(Community involvement)하고, 정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각 학교에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졌다. 시민교육의 핵심요소는 2007년 교육과정 개편과정에서 수정되었다. 현재 영국의 청소년들은 시민교육 수업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정의(Dem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의(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2-B00003).

1) 영국의 중등학교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고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key stages 3과 4로 구분된다. 초등교육과정(key stages 1과 2)에는 2000년에 비 필수교과로 시민교육이 도입되었다.

-ocracy and justice)에 대해서 인식하고, 권리와 책임(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 대해서 이해하며, 영국의 다문화화를 이해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체성과 다양성(Identities and diversity: living together in the UK)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다.

영국이 공교육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을 제도화한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 영국의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기반한다. 이와 함께 공교육 제도 내에서 실시되는 시민교육은 단지 학교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하였다. 영국 시민교육의 철학적 토대를 제시했던 버나드 크릭(Bernard Crick)은 시민교육은 하나의 교과목 이상이며, 지역의 필요에 맞게 제대로 가르친다면, 시민교육에서 가르친 기술과 가치는 학교에서 시작하여 전 방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National Curriculum Citizenship 1999). 학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청소년을 주 타겟으로 실시되는 시민교육은 결과적으로 지역과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전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질수록 공동의 시민의식을 확립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인정되며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식과 기술, 지식에 대해서 배운다. 청소년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으로 인식되며,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성하고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받는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시민교육 제도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중 하나로 공교육을 통한 학교에서의 시민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초·중·고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시민성 관련 연구 논문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주요한 덕목으로 이야기되는 인간의 존엄성, 준법정신,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사회참여도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이 낮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민주시민성에 대한 중요도나 감수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5, 45-6).

이러한 연구에 기반하여 지식전달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참여를 확대하는 시민교육 교과목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sup>2)</sup>.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공교육을 통한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영국의 시민교육이 제도화된 역사와 시민교육의 방향성과 성과를 고찰하여 그 함의를 찾고자 한다. 영국에서 시민교육이 학교에서 필수법정교과로 제도화 된지 10년이 넘는 시점에서 시민교육 제도화 배경과 시민교육의 내용 그리고 시민교육의 성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사회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영국 시민교육의 제도화 배경

### 1. 역사적 배경

20세기 중반이 되기까지 영국의 시민교육은 이웃나라 프랑스에 비해 매우 혼란스럽고 모호했다. 프랑스의 경우 1862년에 이미 시민론 교재를 사용하였으며, 교육부장관 페리의 주도하에 1882년에 시민교육계획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1886년 이후에는 공립초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개혁을 통해서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회복하고 국민적 단합을 달성하려 하였다.

프랑스와 달리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민교육계

2) 전국사회교사모임에서 8차 교육과정에 시민교육 관련 과목의 시수를 편제하거나 시민교육 독자 신설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설치하되 별도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학년에서 매주 한 시간 이상씩 교수되어야 하며, 입시와 관련이 없는 과목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교육과정에는 매 학년별 학습 주제와 핵심개념이 제시되어야 하고, 매 학년별 '시민교육'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획을 시행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계기를 갖지 못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영국의 학교교육은 매우 소홀히 여겨졌다. 산업혁명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 설치의 문제와 함께 교육은 하층민이 자신들의 생활수준에 불만을 갖게 만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히터 2007).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의 학교 교육은 훌륭한 크리스천 시민(good Christian citizens)을 육성하는데 집중되었다. 이 시기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계층에 따라 상이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였다. 즉,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들의 상급자들에게 복종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누우치고 그들은 내세에서 보상을 확신 받을 수 있다고 교육받았다. 반면 최상층 계층의 학생들은 고전 성서 연구나 고대 문명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통해 훌륭한 시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받았다. 19세기에는 종교 수업이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성경이 핵심 텍스트로서 훌륭한 크리스천 시민을 기르는데 사용되었다(조철기 2010).

한편 차티스트 운동이 진행되면서 학교가 좀 더 민주적인 정치 체제 창조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었다. 특히 노동계급의 자녀들을 위한 좀 더 광범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치개혁과 교육개혁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를 두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었다. 즉, 정치개혁을 위해 대중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중교육을 위해 정치개혁을 할 것인가라는 우선 순위 선택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노동계급의 자조교육(self-help education)은 상당한 정도로 조직이 되었으며 수많은 신문과 책자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각성되었다. 학교체계 바깥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교육할 광범위한 기회를 창출하였다.

학교체계에 대한 교육개혁은 1870년에 포스터 교육법(Forster Education Act)이 시행되면서 초등교육에 정부가 전면적으로 개입

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빈곤층과 부유층 모두 사교육에 의존하였고 이로 인해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19세기 중반과 후반에 이르러 공민교육은 더욱 공고화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시민성 또는 훌륭한 시민이라는 표제가 붙은 교과서들이 개발되어 제공되었다. 종교 구속적인 개인적 도덕에서 공통의 공민적 도덕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훌륭한 국가시민(good national citizens)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교육은 애국적이고 제국주의 정서를 호소하는 훌륭한 제국시민(good imperial citizens)의 육성으로 전환되어 갔다. 특히 지리와 역사 교과서에서는 암묵적으로 젊은 노동자인 남성들을 식민지로 이동하도록 격려했으며, 대영제국의 영광스러운 시민으로 행동할 것을 격려했다(조철기 2010). 1904년에는 고 빅토리아 여왕의 생일이 제국의 날로 선포되었으며, 경축행사가 특히 학교에 권장되기도 하였다. 사립학교에서는 앞장서서 학생들에게 제국주의 의식을 불어넣는 선전운동을 행하였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시민교육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국제적 평화를 위한 훌륭한 세계시민(good world citizens)의 육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1930년대에 시민성교육협회(Association for Education in Citizen: AEC)가 설립되어 국제적인 연결망이 결성되었으며 『시민(The Citizen)』이라는 저널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AEC는 출판물을 통해서 시민교육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려 하였으며 동시에 압력집단으로서 행동하고자 하였다(히터 2007).

선거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투표권 부여의 대상이 확대되어 1970년에는 선거권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극적으로 낮춰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학교가 분별 있는 정치교육을 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1969년에 정치협회(Politics Association)가 설립되면서 학문적 차원이 아니라 대중적 수준에서 정치적 교양을 널리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영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

서 정치교육의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었다. 런던 남부의 브릭스턴에서 발생한 1981년의 폭동을 계기로 영국을 다문화사회로 볼 것인가라는 쟁점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탈제국주의 시대에 걸맞은 시민의식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학교에서는 반인종주의 수업이 요청되었으며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 2. 정치적 배경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1988년에 보수당이 당의 색채를 새롭게 하기 위해 ‘능동적 시민권’ 개념을 채택한 것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히터 2007). 능동적 시민권은 일정한 지식과 분별력 그리고 도덕적 신념을 요구하며 18세 이전의 청소년들이 최선을 다해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렸다. 보수당이 ‘능동적 시민권’의 가치를 내걸었던 그해에, 하원 의장은 ‘능동적 시민권을 장려하고 개발하며 인식할 최상의 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시민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크릭 보고서(Crick report)로 알려진 그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학교에서 시민권을 가르치는데 대한 권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권고사항들은 국가교육과정위원회(National Curriculum Council: NCC)로 보내졌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공립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였다.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 ERA)에 의해서 국가공통교육과정이 도입되어 학습권의 보장, 성취기준의 설정, 학교 및 학년 간의 일관성과 연계를 강화하였다. 1989년에 교육과정의 윤곽이 잡히면서 시민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보수당 집권 기간 동안 교육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 소비자

권리 등이 중시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으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그 결과 1997년 총선에서 사상 최저의 투표 참가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영국내 청소년 문제의 증가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영국사회에서 다시 한 번 결속과 통합을 해야 할 계기를 제공하였다. 1997년 총선에서 “교육, 교육,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건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공동체주의에 토대를 둔 시민적 도덕성과 시민 공화주의 사상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와 파트너십을 가진 개인의 시민적 책무성, 타인의 욕구와 관점에 대한 배려,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교육의 강화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신노동당 정권의 교육노동부장관 블런킷(David Blunkett)은 시민교육을 학교의 주요 교과목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시민교육에 대한 권고와 내용을 제공할 시민권 자문단을 구성하게 된다. 크릭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자문단은 “이 나라의 정치문화를 전국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 모두에서 바꾸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능동적 시민으로 생각하며 그럴 의지를 지니게 만들고자”, “청년들이 참여와 행동의 새로운 형태를 찾는 일에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고자” 시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방향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영국은 2002년부터 시민교육을 필수 교과목으로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안에서 의무화 시켰다.

공교육 제도 안에서 시민교육을 실시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영국에서는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2010년 노동당 집권 13년 만에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시민교육의 제도화 흐름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는 첫 연설에서 미국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의 명언 ‘조국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묻지 말라’를 인용하면서 국가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주도하에 시민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한 시기였다면 지금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각 학교의 자율과 선택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학교에게 보다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확보해줄 것을 약속하는 정책들이 발표되면서 시민교육 역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9월까지의 현재의 국가교육과정 틀이 유지되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사회·문화적 배경

영국에서 시민교육을 제도화 하게 된 배경에는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었다. 청소년의 폭력이 증가하고, 학업 중단 및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영국 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청소년 문제와 보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데, 청소년 문제의 근원이 공교육의 부재와 허실에 있다는 자각을 시작으로 1988년 교육개혁법(ERA)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은 영국에서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지양하고 국가교육과정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로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통해서 1991년에 국가교육과정이 시행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문제가 단지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국이 다문화주의로 전환되면서 영국인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위기라는 점에서 촉발되었다. 백인 영국인의 인구증가율은 감소 추세임에 반하여 타 인종의 인구 증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국 학생 중 소수민족에 속하는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4-11세 연령대의 학생들이 같은 연령대 학생들의 20.6%, 11-16세 연령대의 학생들은 1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uropean commission 2009). 소수인종자들은 북동쪽 지역에서 4%에 불과하지만 런던 중심지역 학교 학생들은 3/4에 해당되는 숫자가 소수민족에 해당될 정도로 런던 시내에 소수인종 학생들이 집중

되어 있다(김선미 2011).

인종과 언어는 다르지만 한 영토 안에 거주하는 영국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고 사는 이 다양한 민족구성원들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정체성의 문제가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접근 방향에 대한 비판 역시 비판되었다.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문화에 대한 편견과 전형적 이미지를 양산함으로써 오히려 인종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인종차별은 영국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큰 걸림돌로 지적되었다.

사회 다원화와 다문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전 국민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통합을 꾀할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시민교육이 등장하였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청소년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 아닌 시민으로 바라보고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양성하고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제안되었다. 청소년들이 시민교육을 통해서 인종차별의 문제에 민감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음으로서 영국사회의 통합과 결속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특히 영국은 2005년 런던 폭탄테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영국사회의 통합과 결속의 문제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졌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교육은 매우 중요한 교과목으로 주목을 받는다. 기존의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영국은 다문화교육이라는 주제어로 내세운 정책이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를 표면에 드러내기 보다는 시민교육 속에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녹아들게 하여 관용과 편견 없는 태도 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김선미 2011, 71).

국가 내부의 다양한 문화집단들의 사회적·도덕적 책임감과 지

역 참여, 정치적 문맹 완화 등은 시민교육의 주요한 내용으로 구성되게 된다.

### III. 국가교육과정과 시민교육

1988년에 제정된 교육개혁법(ERA)는 영국 교육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개혁중의 하나였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교육과정이 각 학교에 일임되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교육과정을 통해서 영국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와 덕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과정 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는 교육적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S)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수학습자료실,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원(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QCA)을 통해서 현장 교사들에게 다양한 학습도구와 자료를 제공한다. 많은 학교는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원(QCA)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계획을 위한 현장학습방안(scheme of work)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은 최소한의 법적인 틀일 뿐 보다 종합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것은 학교 현장이다. 시민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장교사들이 국가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다양한 시민교육 자료와 방법을 활용한다.

시민교육을 위한 교재는 민간출판사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NGO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김영인 2007).

#### 1. 시민교육의 모태, 크릭보고서(Crick Report)

1997년 교육기술부에 의해 학교에서의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크릭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민성의 정의, 학교에서 효율적인 시민교육방안 모색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시민성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 정의를 그 시대의 정신과 관심을 반영하여 시민교육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시민교육의 도입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이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시민교육의 개념과 목적, 방향과 방법 등에 관한 지침서가 소개되었다.

크릭보고서라 불리는 이 지침서(Crick Report: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는 영국의 교육기술부가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철학적 바탕을 제공하였다.

크릭보고서는 국가교육과정 내 시민교육의 목적을 제시하였는데, 시민성 함양과 참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며, 권리와 의무, 책임을 깨달아 능동적인 시민(active citizen)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QCA 1998).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시민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 3가지는 첫째, 사회적·도덕적 책임성(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둘째, 공동체 참여(Community involvement), 셋째, 정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이다. 사회적·도덕적 책임성은 학생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책임감을 배우고 학습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책임성은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간의 관계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다.

공동체 참여는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적 문해력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가치 및 민주적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하여 적극적으로 정치참여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표 1> 영국 시민교육의 3가지 요소

시민교육 3가지 요소	내 용
사회적·도덕적 책임성 Social and moral responsibility	학생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책임감을 배우고 학습하게 하는 것.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안에서의 책임감과 또래간의 책임감도 포함.
공동체 참여 Community involvement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하는 것.
정치적 문해력 Political literacy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하고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

출처 : QCA, 1998,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 final report of the advisory group on citizenship, London.

## 2. 필수교과목 시민교육

시민교육은 2000년 8월부터 개정되어 실시되는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비법정과목으로 개인·사회·건강교육(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 PSHE) 과목 안에 처음으로 시민교육 내용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2년 8월부터 중고등과정(11세-16세) 학생들에게 시민교육을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크릭보고서에 의하면 시민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은 너무나 중요해서 필수교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바 있다.

시민교육이 중요한 이유(QCA 2010)는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이 공적인 삶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 기술과 이해를 갖추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의 논쟁적인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토론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 책임, 의무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배우고 법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와 함께 그들은 의사결정과 다양한 형태의 실천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교, 이웃, 지역공동체 그리고 사회에서 능동적 시민, 세계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지받는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및 세계 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둘째,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민족과 종교 그리고 인종적 정체성들을 존중하도록 지지받는다. 그들은 영국에서 시민으로서 공유하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 정체성들을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셋째, 시민교육은 사회정의, 인권, 사회통합과 관련된 이슈를 제기하고 학생들이 부정의, 불평등 그리고 차별에 도전하도록 한다.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며, 좀 더 광범위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을 고려하고, 자신의 의견보다는 타인의 의견과 생각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정보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현재와 미래의 자신의 행동에 반영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대표해서 주장하는 것을 배우고, 관심 이슈를 자유롭게 말한다.

중등교육과정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선정된 시민교육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민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쟁점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시민을 길러낸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치제도 및 법체계, 경제 제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시민교육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학교와 지역 등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비판적 인지 기능을 갖도록 한다.

<표 2> 중등 교육 과정 시민교육의 목표

key stage 단계	시민교육의 목표
key stage3 (7-9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쟁점, 문제와 사건에 대하여 학습하고 토론한다.</li> <li>· 일상생활과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는 법적·정치적·종교적·사회적·경제적 제도와 시스템의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li> <li>· 학교, 이웃, 보다 넓은 커뮤니티에서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배운다.</li> <li>· 책임감 있게 지역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지방·국가·세계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배운다.</li> </ul>
key stage4 (10-1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별로 정치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문화적 쟁점, 문제, 사건을 학습하고, 사고하며 토론한다.</li> <li>· 자신의 삶과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정치적·종교적·사회적·입헌,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되며 영향을 끼치는지 심도있게 관찰한다.</li> <li>· 자신의 학교·이웃과 보다 넓은 커뮤니티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참여한다. 그리고 비판적 인식능력을 발전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li> <li>· 공동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지방·국가·세계 수준에서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위한 공정·사회정의·존중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한다.</li> </ul>

출처: DfES and QCA, 1999, *The National Curriculum for England*.

### 3. 시민교육의 핵심요소 3가지

시민교육은 2002년부터 중등교육과정 안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실시되었다. 2002년부터 학교에서 시민교육이 필수 교과목으로 실시되면서 교육의 3대 요소로 제시된 것은 바로 사회적·도덕적 책임성, 공동체 참여, 정치적 문해력이었다. 커리큘럼은 바로 이러한 3대 요소를 주축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2007년 교육과정 개편과정에서 시민교육의 3대 요소는 대폭 수정되었다. 2007년의 시민교육 3대 요소는 첫째, 민주주의와 정의(Democracy and Justice), 둘째, 권리와



책임(Rights and responsibilities), 셋째, 정체성과 다양성(Identities and diversity: living together in the UK)이다.

<표 3> 2002년과 2007년의 시민교육 요소

2002년	2007년
사회적·도덕적 책임성	민주주의와 정의
공동체 참여	권리와 책임
정치적 문해력	정체성과 다양성

2007년에 수정된 시민교육 핵심 3가지 요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2007년 개정 후 시민교육의 요소

시민교육 3가지 요소	내용
민주주의와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에 사는 시민이 정치제도와 사법제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역할. 민주주의의 한 부분으로서 자유, 정의로서의 공평과 법 규율, 힘과 권위, 책임이 포함.</li> <li>· 청소년들은 다양한 수준과 종류의 책임을 학습해야 하며,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책임에서부터 의회와 국회 등 중앙정부로부터 요구받는 책임까지도 인식하도록 요구받음.</li> </ul>
권리와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종류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이해함. 즉 정치적, 법적, 사회적, 도덕적 수준에서의 권리, 의무, 책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함. 더 나아가 권리와 책임은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사회적 권리와 책임 강조</li> </ul>
정체성과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의 다문화 역사, 현황 및 배경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졌지만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울 수 있어야 함. 또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될 영국사회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함.</li> </ul>

2007년에 시민교육의 요소가 수정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박선영(2011)은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와 정의가 시민교육의 첫 번째 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영국사회 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자각과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였다. 이와 함께 권리와 책임의 영역은 이전과 달리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비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정체성과 다양성 부분은 다문화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2007년 이전의 시민교육이 백인위주의 동화주의적 시민교육이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다문화사회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 IV. 통합적 접근의 시민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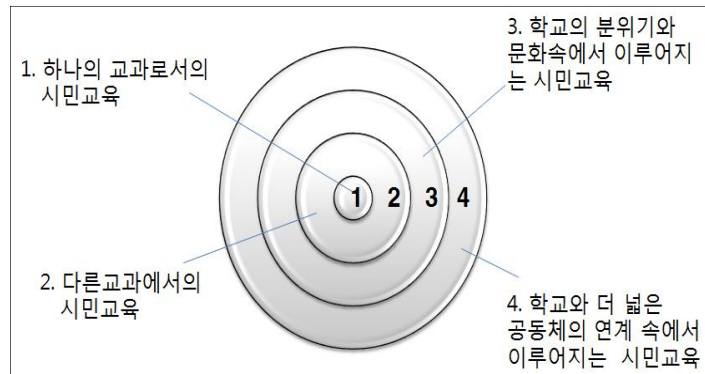
### 1. 시민교육 교과목의 분리와 통합

영국에서 시민교육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교과로서 운영되면서 동시에 다른 교과목 속에서 시민교육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독립된 시민교육 수업은 다른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사법제도, 선거, 의회의 활동 등의 내용을 다룬다. 이와 함께 다른 교과를 통해서 시민교육이 실시되기도 한다. 역사나 지리, 종교교육은 시민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로서 시민교육 교과과정의 영역들을 분담하여 가르칠 수 있다. 또한 시민교육은 단지 수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문화와 풍토에도 영향을 끼치며, 지역사회와도 연계를 맺는다(그림 1 참조).

시민교육을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가르칠 때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Huddleston and Kerr 2006, 48).

- ① 정치와 법에 관한 영역들을 포함하여 다른 교과에서는 다루지 않는 시민교육 교육과정의 다양한 영역들을 다룰 수 있다.
- ② 모든 학생들을 위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직원들로 전문가 팀을 꾸릴 수 있다.
- ③ 연속성과 발전성을 도모하기가 더 쉽고, 감독과 평가가 간단해진다.
- ④ 모든 학생들에게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
- ⑤ 시민교육에도 다른 교육과정 교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뚜렷한 정체성과 지위를 부여한다.
- ⑥ 학교의 문화와 분위기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와의 관계를 통해 학습된 요소들을 포함하여,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다른 요소들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1> 시민교육의 접근방법



출처: Ted Huddleston and David Kerr, 2006, Making Sense of Citizenship: A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Handbook, The Citizenship Foundation, p. 49.

시민교육에서는 다른 교과목에서 다루지 않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Huddleston and Kerr 2006, 48).

<표 5> 시민교육 핵심 내용

내용
법적 권리와 책임 예) 소비자 권리, 아동의 권리, 인권
사법 시스템 예) 형법과 민법, 경찰의 역할
다양성의 정치적 측면 예) 민족적 정체성, 통합, 평등
중앙과 지방정부 예) 민주주의와 다양한 형태의 정부, 법률의 제정과 개정
선거시스템과 투표의 중요성 예) 대의제의 다양한 형태들
자발적인 단체의 활동 예) 국제엠네스티
사회에서 미디어의 중요성 예) 언론의 자유
글로벌 공동체로서의 세계 예) EU, Commonwealth, UN
경제의 여러 측면들 예) 과세, 공공 재정과 서비스

영국에서 시민교육은 법정필수 교과목으로 독립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지만 다른 과목들과 연계하여 실시될 수도 있다.

시민교육은 역사, 지리, 종교교육, 영어, 과학, 수학, 예술과 디자인 교과와 연계하여 실시되고 있다. 수학이나 과학의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민교육과의 연계를 고려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시민교육교과는 모든 교과와 연결이 될 수 있다.

과학의 경우 윤리적인 문제와 환경에 관한 문제 등을 중심으로 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토론할 수 있다.

과학교과에서 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과학수업에서 시민교육 내용을 다루는 사례

과학	시민교육 관련 내용
변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형질 측면에서 인종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기</li> <li>· 영국의 다양한 민족 정체성</li> </ul>
번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에 관한 토론: 공익이나 사익이나 특히 최근의 MMR 이슈</li> </ul>
유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법에 관한 토론, 배아 이용, 복제 인간 등에 대한 토론</li> <li>· 유전학적 스크리닝, 고용주와 보험회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지?</li> </ul>
유전자 조작(GM)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과 인간의 복제</li> <li>· 유전자 조작 식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찬반논쟁</li> <li>· 영국 슈퍼마켓에서 GM 식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논쟁</li> </ul>
에너지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자원이 고갈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li> <li>· 에너지 세대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 - 어떻게 최소화 시킬 것인가?</li> <li>·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인간의 권리와 책임 - 지역과 세계적인 영향력</li> </ul>

출처 : Ted Huddleston and David Kerr, 2006, Making Sense of Citizenship: A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Handbook, The Citizenship Foundation. p. 73.

위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본 과학의 제반 이슈를 다루는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내용은 시민교육 교육과정 전체와 연계되어야 하며, 시민교육 조정관과 함께 계획을 하게 된다. 수학 역시 시민교육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 수학의 경우 숫자와 통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사회의 윤리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다. 수학교과에서 다루는 시민교육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수학수업에서 시민교육 내용을 다루는 사례

수학	시민교육 관련 내용
Ma4- 데이터 이용과 적용 · 데이터 수집, 해석, 토론, 추론하기 · 데이터를 다양한 그래프 형태로 재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통계</li> <li>· 빈곤, 건강, 환경에 관한 세계적인 통계</li> <li>· 경제와 경제 작동 방식 관련 통계</li> </ul>
Ma2- 숫자를 이용하고 적용하기 · 큰 수를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기 · 비례와 비율의 개념 · 덧셈, 뺄셈, 백분율, 분수와 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 - 각종 계산 예) 투표율과 과반수 확보에 필요한 득표율 범위, 비례대표제 대 단순다수제</li> <li>· 부채와 질병(AIDS/HIV), 세계무역, 이민에 대한 세계 통계</li> <li>· 공정무역- 여러 집단과 조직에 돌아가는 몫을 보여주는 제품 원가 분석</li> <li>· 개인 재정 - 예산수립, 신용카드 및 대출 금리, 할인 상품의 할인액 계산, 부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li> </ul>

출처 : Ted Huddleston and David Kerr, 2006, Making Sense of Citizenship: A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Handbook, The Citizenship Foundation. p. 77.

수학 역시 시민교육과 연계할 수 있다. 통계를 학습할 때 범죄, 빈곤, 건강, 환경 등에 대한 통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수치의 이용과 적용을 학습할 때에는 다양한 선거결과 수치를 분석해볼 수 있으며, 공정거래무역의 문제 및 개인의 제정 관련 이슈도 다룰 수 있다. 숫자와 통계는 토론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제시된다. 숫자와 통계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조작되거나 잘못 해석될 수도 있다. 학생들이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데이터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의미를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기회를 갖게 된다.

## 2. 공동체와 연결되는 시민교육

시민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밖의 공동체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 것은 시민교육 교육과정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다. 크릭 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이 '능동적인 시민의식'(active citizenship)을 함양하는 시민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학교의 운영에 참여해보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평의회, 국회의원, 유럽의회의원, 시민단체, 경찰, 종교단체 등과 같은 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시민교육의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QCA 1998).

지역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자신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며, 새로운 기술과 지식, 이해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개인으로서의 자신감을 기르고 방과 후의 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다. 공동체 참여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선행'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참여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인 시민이 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돕는데 더 큰 뜻이 있다.

시민교육 수업은 지역 단체 및 조직과 적극적인 연계를 맺으며 진행된다. 지역단체와 조직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견학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자원봉사 자리를 제공하거나 전문가를 파견하기도 한다. 지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와 조직은 다양하다. 지방정부, 대학의 법학과 정치학과, 교사양성과정 시민교육 수강생, 지방의회 의원, 시장, 국회의원, 유럽의회의원, 경찰과 소방국, 청소년 봉사단, 주민 센터, 자선활동단체, 종교단체 등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 단체들은 시민교육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유럽적, 전 지구적 공동체 모두를 포함한다. 여러 종류의 공동체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시키며, 전 지구적 재앙이나 부당행위에 대한 지역적 및 국가적 대응을 성찰한다. 특히 영국의 시민교육에서는 유럽연합과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 시민은 유럽연합의 시민이기 때문이며, 영국 및 유럽연합 시민들의 행위가 다른 나라의 시민들과 전 지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영국은 유엔과 영연방 그리고 기타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럽 및 국제적인 문제를 성찰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옷이나 기타 소지품들의 원산지는 어디인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의 문제, 학생들이 조성한 기금의 해외 수혜자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자신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연결점을 찾아본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학교생활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교통과 에너지 이용, 쓰레기 관리, 구매 등의 문제가 유럽 및 국제적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유엔회의나 영연방 정상회의, G8 정상회의처럼 모의행사를 통해서 관련 이슈를 다룰 수 있다. 학교간의 연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 펜팔, 이메일, 화상회의를 통해 다른 나라의 학교들과 연계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솔웨이 커뮤니티 스쿨(Solway Community School, 실로스에 소재)의 한 교사는 멕시코시티의 한 교사와 교류를 하다가 이를 자신의 학교에 확대 적용하였다고 한다. 학교평의회를 통해서 전달되었으며, 학생의원들은 각자 학급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보고했고, 멕시코의 친구들과 토론할 주제를 선정했으며, 그들에게 보여줄 이메일을 인쇄했고, 멕시코에 보내기 위해 실로스 지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Huddleston and Kerr 2006, 101).

**전 지구적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한 학교 차원의 접근**

알트링캠 여자 그레머 스쿨

언어특성화 학교인 알트링캠 여자 그레머 스쿨은 청소년들에게 철저한 전지구적 시민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헌신하는 학교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좋은 본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학교는 남아프리카와 베이징에 있는 학교들과의 자매결연, 유럽연합에서의 직무경험, 세계 쉐린지 탐험, 그리고 코메니우스 프로젝트를 통한 유럽 학교 다수와의 연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재정은 국제개발부가 후원한 개발교육프로그램과 지구생태발자국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확보했다.

인권주간에 학생들은 박해를 피해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글로벌링크가 주최한 이동 전시회(안전을 향한 탈출)를 경험할 수 있었다. 11학년 학생들은 종교교육 시간에 인권을 공부했고, 이 학교 앨네스트 그룹은 인권에 관한 조회를 이끌었으며, 영국 변호사협회에서 나와 인권법에 관한 특강을 실시했다.

9학년은 유럽연합의 스쿨넷이 후원한 국제 ‘유럽의 날’행사에 참여했다. 품그룹들이 여러 나라를 조사했고, 발표를 준비했으며, 유럽식 바자회의 일환으로 전시물을 설치했다. 이 행사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낙서벽과 유럽 콜라주 그리고 유투화에 대한 찬반표결(5:1로 부결)이 준비되었다.

전지구적 시민의식 문제는 지리 교과를 통해, 그리고 핵심단계3에서 독립된 시민교육 수업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있다. 지리학과는 학생들의 ‘경과 파일’에 도움을 주는 명시적인 시민교육 인증 수업을 실시해왔다. “남극대륙은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7학년의 역할놀이가 그 예이다. 9학년은 학교에 공정무역 매점을 설치하고, 초콜릿 바와 커피에 대한 공정무역 캠페인을 발표하는 등 공정무역에 초점을 맞춰왔다.

국제적인 활동에 대한 교직원들의 헌신은 교장과 고위 경영진에서 시작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교직원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언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이 학교 확풍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학교가 명실상부하게 국제적인 시야를 가진 학교가 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출처: Ted Huddleston and David Kerr, 2006, Making Sense of Citizenship: A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Handbook., The Citizenship Foundation. p. 102.

**V. 시민교육의 성과 및 시사점**

영국에서는 시민교육 제도화 이후 시민교육에 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교육 성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가 관련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이러한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검토되며 기획된다.

우선 2010년 1월에 발표된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ED)의 리포트 “Citizenship established Citizenship in schools 2006/09”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을 위한 준비와 결과들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커리큘럼에서 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수립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Key stage 2단계 학교의 절반 이상 그리고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시민교육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쟁점(topic)을 중심으로 과목들 간의 연계를 갖는 통합교과적 접근(cross-curricular)을 할 때 그 성과가 좋았다. 이와 함께 시민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지속가능성, 글로벌 연계와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가시켰다는 점이 강점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지식과 이해, 특히 정부와 정치의 핵심영역에 대한 인식에서 심각한 격차가 있다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교육부는 교사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시민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업자료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OfSED 2010).

2000년도의 교육과정 개혁으로 시민교육 교과가 도입되고, 2002년부터 필수법정교과가 되면서 시민교육 효과에 대한 중단연구가 이루어졌다. 국가교육연구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NFER)에 의해 2001년에서 2009년에 걸친 8년 동안 잉글랜드의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The Citizenship Education Longitudinal Study(CELS)는 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

는지 조사하였다. 11세에서 18세가 될 때까지 학생들의 코호트를 추적한 연구로서 시민교육의 성과에 대한 중요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시민교육 성과의 핵심은 각 연령에서 시민적 참여와 정치적 참여가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평등과 사회에 대한 태도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난민들과 이주자들, 범죄자, 수감자, 환경 제약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참을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고 정치적 영역에서 참여와 효율과 신뢰의 수준이 떨어졌다. 그리고 시민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45분보다 더 많은 수업시간이 요구되며 18세까지 시민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Avril and David et. al. 2010).

영국의 시민교육에 대한 성과는 국제적 비교를 통해서도 측정될 수 있다. The IEA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ICCS)는 38개국의 학생들의 지식과 이해, 태도를 연구하여 21세기에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각국을 비교 조사한 결과물이다. 이 결과물을 통해서 보면 영국의 학생들은 참여국과 비교했을 때 시민적 지식과 이해의 국제적 테스트에서 중간 이상을 보였지만,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 결과는 평균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민주적이며 인내심이 있는 관점과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과 국방, 학교, 정부에 대한 높은 수준의 믿음이 있으나 정치인들과 정당, EU조직과 미디어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믿음을 보이고 있다(Julie and Pauline et. al. 2010).

국가교육연구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NFER)의 Citizens in Transition Study(CiTS)는 CELS에 기초하고 있으며 공식교육과 청소년의 발달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잉글랜드, 스코트랜드와 웨일즈의 18-25세 청소년들의 시민적 지식, 이해, 태도를 비교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20세 청년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59%는 2010년 선거에서 투표를 하였다. 그들은 정치가와 정부가 다루어야 할 이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제(24%),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이민(10%)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부족하고 그들의 반 이상은 정당은 자신들의 핵심 이슈를 적절히 다룰 수 없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시민성을 일차적으로 '사람의 권리'에 대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은 '훌륭한 시민'을 그들 공동체에 기여하고 법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NFER and Citizenship Foundation 2010).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의 시민교육 제도화 방향과 내용은 한국 사회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영국은 크릭 보고서라는 국정정책보고서를 통해서 시민교육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에서 효과적인 시민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교육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시민교육의 최종목표는 시민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평가하는 핵심 기준점으로 작동된다. 또한 시민교육의 최종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정부와

NGO간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준거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시민교육을 제도화 하고자 할 때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핵심요소는 무엇인지 문헌해설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민교육의 목표와 핵심요소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시민교육을 체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간의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은 학교를 넘어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지역의 NGO는 시민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과정이야말로 능동적인 시민을 육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유럽평의회는(EDC 2008) 1997년에서 2000년까지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세계적이고 범유럽적인 맥락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시민교육과 관련된 현장에서 가정과 학교, 공동체의 집단들, 정부관계 기관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국 사회에서 향후 시민교육 제도화와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협력적인 시민교육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이다. 영국의 사례는 시민교육 거버넌스 구성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교육을 체계적인 연구하고 지원해주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영국의 시민교육 성과에 대한 종단적·횡단적인 연구결과는 향후의 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지원하는데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적합한 시민교육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그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 < 참고문헌 >

- 김선미, 2011, “영국의 다문화교육 정책 진개의 특성”, 『교육문화연구』, 제17집 1호, pp. 59-78.
- 김영인, 2007, “영국의 청소년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전략과 과제』, 서울: 오름, pp. 177-212.
- 김원태, 박선영, 송용구, 양설, 이은주, 이인선, 정문모, 2006, 『주요 외국 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데릭 히터(Derek Heater) 저, 김해성 옮김, 2007, 『시민교육의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박선영 2007, “통합교과를 통한 영국의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전략과 과제』, 서울: 오름, pp. 213-244.
- \_\_\_\_\_, 2011, “영국의 청소년정책과 시민교육고찰”, 『청소년문화포럼』, Vol. 26, pp. 67-90.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5, 『시민교육 제도화를 통한 21세기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방안연구』, 국무총리 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조철기, 2010, “영국에서 영역 정체성의 정치와 교육”, 『사회이론』, 가을/겨울, pp. 175-281.
- Department for Education, 2010, *The Importance of Teaching - Schools White Paper*.
- European Commission, 2009., *Emilie Research Project, British Education Policy and the Challenge of Migration, Anti-Racist, Multicultural and Citizenship Education*, September.
- Huddleston, Ted and Kerr, David, 2006, *Making Sense of Citizenship: A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Handbook*, The Citizenship Foundation.

- Nelson, Julie, Wade, Pauline and David Kerr, 2010,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ICCS)*, NFR.
- Keating, Avril, Kerr, David. Benton, Tomas, Munday, Ellie, and Joana Lopes, 2010, *Citizenship Education in England 2001-2010: Young People's Practice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the Eight and Final Report from the Citizenship Education Longitudinal Study(CELS)*. Research Report DFE-PR059, Department for Education.
- OfSED, 2010, *Citizenship Established? Citizenship in Schools 2006/09*, Department for Education.
- Osler, A and H. Starkey, 2006,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 Review of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1995-2005". *Research Paper in Education*, 24(4), pp. 433-466.
- Osler, A and H. Starkey. 2005. *Changing Citizenship: Democracy and Inclusion in Education*, Open University Press.
-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QCA), 2007, *Citizenship Programme of Study for Key Stage 3 and Attainment Target*. London.
-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QCA), 1998,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the Teaching of Democracy in School: Final Report of the Advisory Group on Citizenship*, London.
- The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NFER) and the Citizenship Foundation, 2010, *Citizens in Transition Study(CiT)*, Department for Education.

## A Study on Citizenship Education in England

Jeong, Jae-won  
(Kyunghee University)

### Abstract

This research attempted to derive implications that Korean society can obtain by examining the background of England's institutionalizing citizenship education enforced with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 content of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result of citizenship education. England is a country that has the longest tradition of democracy in the world but actually it was not before the 1990s that it increased its interest in full-scale arguments over citizenship education. Also, it was in the 21st century that it attempted to systematize and institutionalize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s.

Citizenship education appeared as the means to lead the people to social participation and integration by overcoming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country's conversion into multicultural society and increase in the problems of young people. The purpose of citizenship education within national curriculum is to help equip young people with knowledge, skills and understanding that are needed to perform their roles in a civil capacity. It is to enable them to learn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materialize the enhancement



of citizenship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o practice life as active citizens realizing their righ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England's citizenship education is operated as an independent curriculum in itself and, at the same time, actively integrates the contents of citizenship education into other curriculums. Furthermore, citizenship education is not only limited to classes but also exerts influence on school culture, being connected with communities. After citizenship educ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young people's understanding of communities, sustainability, global connections and human rights has increased through citizenship education.

**Keywords :** citizenship education in England, school citizenship education,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ship education